

<제 598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지역 의료진 위한 응원꾸러미 1,000상자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16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송종욱 광주은행장, 박흥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의료진에게 전달하기 위한 5천만원 상당의 '응원꾸러미' 1,000상자를 전달했다.

'응원꾸러미'는 전남 나주·장흥의 농산물 및 홍삼 등과 비타민 등의 건강식품, 간식, 즉석식품, 마스크팩과 핸드크림 등 총 17종류의 응원물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라남도를 통해 전남지역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해양에너지

◆ 2020년 임금협약 체결



해양에너지(사장 김형순)는 지난 16일 김형순 사장과 범진기 해양에너지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대표가 모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사화합을 실현하는 '20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체결했다.

이번 조인식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회사의 지속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대내외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였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의 노사문화를 유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김형순 사장은 "이번 합의는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 노사가 공감대를 찾아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조기에 임금협상이 마무리 됐다" 며, "앞으로도 노사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회사의 미래를 준비하고 지속 발전하는데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II. 광주경중 소식

사무국 일지 (09.14 ~ 09.18)

- 09.14(월)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 광주시 코로나19 대응 말바우 전통시장 방문 동행
* 한국폴리텍 V 대학 일학습병행제 운영위원회(서면)

1. 노사 동향

■ 고용부는 ‘긴급피해지원패키지’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 고용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긴급피해지원패키지’에 포함된 고용부 소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의 집행 가이드라인 발표(9. 15)
 - 금번 가이드라인은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고용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통과시 확정된 집행계획을 다시 발표할 방침
 - ※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7조8천억원 규모이며, 이 중 고용안정 관련 예산은 1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

■ 한국노총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 개최(9. 14)

- 한국노총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공약 실천방안,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운영 및 향후 과제 등 논의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각종 노동정책들의 진행경과 등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정기국회 회기 중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
 -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분기별 ‘정책협의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운영을 통해 정책협약 이행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금번 간담회에서 빠른 시일내 ‘정책협의회 개최’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활동 지원을 요청
 -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최근 9개 핵심과제와 과제별 책임의원 선정 등 구성을 완료했으며, 9월부터 활동을 개시할 방침
 - ※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총 46명으로 구성되며, 윤후덕 국회의원,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선임

■ 금속산업 노사는 2020년 산별교섭 의견접근안 합의(9. 16)

-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9. 16 제13차 산별교섭에서 2021년 적용 금속산업 최저임금, 근로3권 보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접근안 마련
 - 금속노조는 추석 이후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접근안에 대해 승인 여부를 논의하고 10월 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
 - ※ 2019년 금속노조 주요일정 : 8. 21 의견접근안 합의 → 9. 19 「중앙위원회」 → 9. 30 ~ 10. 2 조합원 찬반투표(86.9% 찬성 투표자 대비) → 10. 15 조인식

■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가입 무산

-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은 9. 9 ~ 10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가입 안건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
 -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1,983명 중 1,907명이 투표해, 투표자 대비 찬성 60.7%(1,158명), 반대 39.0%(743명)로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의결정족수에 미달(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찬성)
 - ※ 르노삼성 노동조합은 8. 24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가입 안건을 의결
 - 한편, 르노삼성 노사는 7. 6 2020년 임단협 상견례 이후 지금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올해 11월 임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10월부터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임단협 진행에 난항 우려

2. 판례 동향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정의행위의 일환으로 집회를 하고, 대체인력 투입을 제지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임(대법원 2020.9.3. 선고, 2015도1927 판결).

1. 사실관계

- 도급업체인 회사(이하 'A사')는 수급업체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업무, 청소미화업무 등을 수행함.
 - 수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수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신규 수급업체로 고용승계되어 A사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함(이하 수급업체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수급업체들'이라 함).
- 이 사건 수급업체들의 근로자들은 OO노동조합 A사 지회(이하 'A사 지회') 소속 조합원으로, 이 사건 수급업체들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노동쟁의 조정 절차도 불성립되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12.6.25. 파업에 돌입함'.
 - 소속 조합원 3~40명은 3일간 1~3시간에 걸쳐 A사 사업장 내 본관 건물 및 건물 사이 인도에서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틀어놓고 이 사건 수급업체들에 대하여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울동과 함께 노동가를 제창하며 집회를 함.
- A사 청소업무 수급업체인 회사(이하 'B사')는 파업으로 중단된 청소 등의 업무를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함.
- 원심(대전지방법원 2015.1.15. 선고, 2014노390 판결 참조)은 △도급업체인 A사 사업장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으며, △B사가 투입한 위법한 대체근로자들에 대항하기 위한 상당 범위 내의 실력행사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2. 판결요지

-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사용자의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항상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업체인 A사 사업장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하더라도 아래 이유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 **(목적)**동 집회는 이 사건 수급업체들을 상대로 임금인상, 성실교섭 촉구 등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것임.
 - **(절차)**단체교섭이 결렬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도 불성립하자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함.
 - **(수단)**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거나 행진을 하는 등 집회나 시위에서 통상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했고, 총 3일간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폭력이나 시설물의 파괴를 수반하지 않음.
 - 집회 장소가 평소 이 사건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통행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장소이고, A사 시설관리권을 배제하는 등 전면적이고 배타적인 점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A사 직원들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A사는 본관 건물 지하에 A사 지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왔고, A사 지회는 A사 사업장 내에서 이 사건 수급업체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했음.
-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A사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있음.

○ **(대체근로 저지 관련 업무방해)** 대법원은 ①A사 청소업무 수급업체인 B사가 대체 근로자들을 투입한 행위가 위법한 대체근로에 해당하며, ②아래 이유로 대체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한 것은 위법한 대체근로자 투입에 대한 상당 범위 내의 실력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을 유지함.

- 집회 참여 조합원들은 여러 차례 대체근로자들이 B사의 기존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대체근로자들이 신분 확인을 해주지 않은 채 청소업무를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함.
- 구체적으로 대체근로자들의 앞을 막으면서 청소를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업무를 방해하였으나, 이는 폭력, 협박 및 파괴행위가 아닌 소극적·방어적 행위로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됨.
- 일부 집회 참여자들이 대체근로자들에 의해 수거된 쓰레기를 복도에 투기하여 A사 본관 건물 일부 공간이 훼손되고 A사 직원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나, 쓰레기 투기행위 역시 대체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결과를 향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3. 시사점

- 금번 판결은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당연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칙은 재확인함.
- 다만 대법원은 사내하도급의 관계에서 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로로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이를 위해 근로 장소를 제공하는바, 수급인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시함.

-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급인에 대한 쟁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① 수급인에 대하여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일 것을 전제로, ②△쟁의행위의 목적과 경위, △쟁의행위 방식·기간·행위 태양,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 규모, △참여 근로자의 수, △쟁의행위 장소의 규모·특성·종래 이용관계,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 제한 정도,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

○ 한편, 최근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최근 대법원은 원청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한 것을 정당행위로 인정(대법원 2020.4.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참조)함.
-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하청업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교섭의무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하여 하청업체와 공동 노력하라는 권고(2020.6.1. 행정지도 결정)를 내리기도 함. 끝.